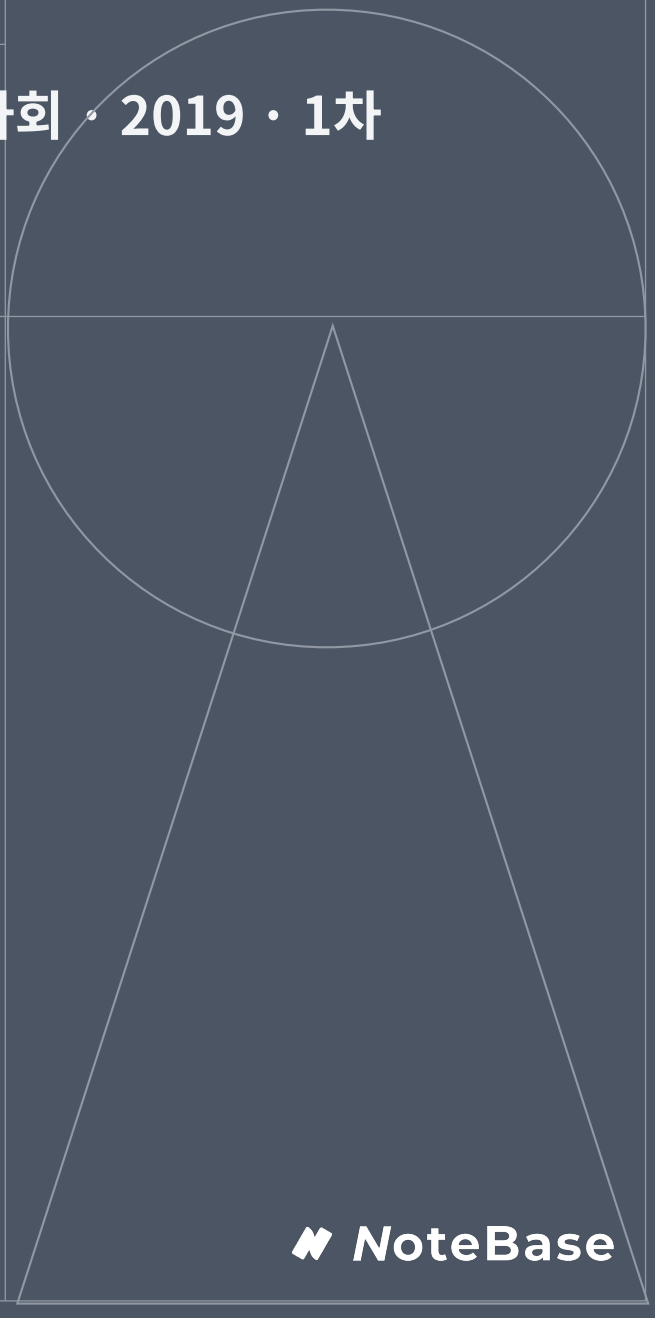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9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9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9 · 1차

문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③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④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예외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허락받은 특정 영업, 유언, 임금 청구의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행위능력 =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언적령 = 법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다.

핵심 구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유언은 17세에 달해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임금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5조·제8조·제1061조와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민법상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O —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③ X — 민법은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틀린 표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④ O —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만 16세 이상'을 유언 가능 연령과 혼동하기 쉽다. 유언은 일반적인 미성년자 법률행위와 달리 17세에 달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성년자 문제에서는 먼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각 선지가 권리만 취득·의무만 면제, 허락받은 특정 영업, 17세 이상 유언, 독자적 임금 청구라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미성년자의 단독행위 예외는 '순수한 이익, 허락받은 특정 영업, 17세 유언, 임금 청구'이다.

NoteBase

문 2.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기관(조정담당 판사 등)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

③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송 목적의 값(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

④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인정: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내용증명,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의 기능과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내용증명의 증명 범위와 소액사건의 소송목적의 값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이다.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소액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한 사실과 그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지만, 문서에 적힌 주장 자체가 진실이라거나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내용증명우편은 특정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그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법률관계의 실제 존재나 기재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② O
민사조정은 민사 분쟁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 등 법원의 조정기관이 당사자의 주장을 조정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민사조정법상 제도이므로 옳다.

③ X
소액사건의 기준을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
올바른 표현: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④ O
소액사건심판법상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다만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2,000만원 이하'는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혼동하게 하는 표현이다. 현재 소액사건의 기준은 3,000만원 이하이다. 또한 ①에서는 내용증명이 '발송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한다는 점과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사 분쟁의 간이절차 문제에서는 각 제도의 기능과 숫자·예외를 나누어 판단한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의 증명일 뿐 진실성의 증명은 아니며,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이고, 가족의 무허가 소송대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한정된다.

암기 포인트

내용증명은 발송을 증명하고,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다.

NoteBase

문 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시설 밖에서 사회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처분이다.

② 치료감호: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치료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처분이다.

③ 보호처분: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수강명령: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보호관찰·치료감호·소년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목적과 집행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범죄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부과하는 예방적 처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처분이고, 수강명령은 범죄 성향의 개선 등을 위한 교육이나 강의를 받게 하는 처분이다.

핵심 구분

보호관찰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하는 처분이고,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처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지만 수강명령은 정해진 교육이나 강의를 받게 한다. 「형법」상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대상자를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지도·감독하는 사회 내 처우이다.

② O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 가운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처분이다.

③ O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된다.

④ X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은 수강명령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이다. 수강명령은 대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이나 강의를 받게 하는 처분이다. 다만 「형법」상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부분은 옳다.
틀린 표현: 수강명령은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이다.
올바른 표현: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일정한 교육이나 강의를 받게 하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수강명령의 명칭 뒤에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을 붙인 뒤, 집행유예기간 내 집행한다는 옳은 문장을 덧붙였다. 앞 문장이 틀렸으므로 선지 전체가 틀리며, 처분의 명칭과 실제 활동을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설 밖에서 지도·감독하면 보호관찰,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면 치료감호, 무보수 봉사활동이면 사회봉사명령, 교육·강의 수강이면 수강명령으로 판단한다. 한 선지에 문장이 둘 이상 있으면 각 문장의 옳고 그름을 따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봉사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은 수강명령이다.

NoteBase

문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사 합의부가 관할하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④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배심원의 수와 자격, 배제결정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중대사건의 배심원 수에 관한 원칙과 자백 사건의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배제결정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핵심 구분

국민참여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대상사건에는 배심원 9인이 참여하고, 그 밖의 대상사건에는 7인이 참여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은 배심원 5인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배심원 자격자로 정한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변호사와 경찰·교정 공무원은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X —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배심원은 7인이 아니라 9인이다. 틀린 표현: '7인의 배심원'. 올바른 표현: '9인의 배심원'. 다만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 법원이 5인으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다.
③ O —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원칙적인 대상사건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포함된다.
④ O —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은 공범인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에서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이라는 원칙을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사건에도 잘못 적용하기 쉽다. 또한 5인 예외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선지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심원 수는 먼저 법정형을 확인한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9인, 그 밖의 대상사건이면 7인이고,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5인으로 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중대사건 9인, 일반사건 7인, 주요 공소사실 인정 시 5인이다.

NoteBase

문 5.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로 다시 환부하는 형식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환부거부)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법률안의 제출 주체, 일반 의결정족수,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 국회의 재의결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환부거부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대한민국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규정하고, 국회법은 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9 · 1차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선지가 제출 주체를 모두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틀린 것은 아니다.

② X
대통령이 법률안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이다.
틀린 표현: '20일 이내'
올바른 표현: '15일 이내'

③ O
대한민국헌법 제49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O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오답 포인트

②의 '20일'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잘못 바꾼 표현이다. 일반 법률안의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과 재의결의 가중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안 절차 문제에서는 제출 주체, 대통령의 처리 기간, 일반 의결정족수, 재의결 정족수를 차례로 대조한다. 대통령의 공포와 재의요구는 모두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이고,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법률안 재의요구는 15일, 재의결은 과반 출석·3분의 2 찬성이다.

NoteBase

문 6.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판의 당사자는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의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주체와 제청신청 기각 후의 불복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청한다는 점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헌법소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위헌소원은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다.

핵심 구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재판의 당사자는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재판의 당사자는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② O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담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X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틀린 표현: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④ X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표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당사자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다'는 표현과 ④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함께 혼동하기 쉽다. 당사자의 직접 제청은 허용되지 않지만,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위헌소원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③처럼 기각결정에 항고하는 절차와 위헌소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청 단계에서는 '당사자는 신청,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청'으로 주체를 나눈다. 신청이 기각된 뒤에는 '항고는 불가, 헌법소원은 가능'으로 불복 방법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당사자는 신청, 법원은 제청, 기각결정에는 항고 불가·위헌소원 가능이다.

NoteBase

문 7.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일탈행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사회규범이 약화되거나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② 낙인이론: 1차적 일탈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그 행위자가 지속적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 자신이 일탈자라는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된 개인이 일탈행동을 습관화하게 되며,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③ 갈등이론: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결과로 본다. 이에 대한 해결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

④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개인이 일탈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을 학습하고 일탈 동기를 내면화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학습하게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각 이론의 명칭과 핵심 원인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된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낙인이론: 타인의 낙인과 그에 따른 부정적 자아 형성이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갈등이론: 일탈의 규정과 발생을 사회의 권력 불평등 및 구조적 모순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차별적 교제 이론: 일탈자와의 접촉을 통해 일탈의 기술, 동기, 정당화 태도를 학습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뒤르켐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기존 규범이 약화되어 사회가 무규범 상태에 빠질 때 일탈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② O — 낙인이론에서는 최초의 일탈보다 주변의 낙인과 그 낙인을 받아들인 부정적 자아 형성이 2차적 일탈을 지속시키는 과정에 주목한다.
③ O — 갈등이론은 일탈을 개인의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 및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책도 불평등한 구조의 변혁에서 찾는다.
④ X — 틀린 부분은 일탈의 기술과 동기를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한다는 설명을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가 일탈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는 일탈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아노미 이론처럼 보이지만, '접촉', '기술과 동기의 학습', '정당화 태도의 학습'은 차별적 교제 이론의 결정적 표현이다. 머튼은 학습이 아니라 목표와 수단의 괴리에 주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론명과 대표 원인을 연결해 판단한다. 규범 약화는 뒤르켐, 목표와 수단의 괴리는 머튼, 타인의 낙인은 낙인이론, 일탈자와의 접촉과 학습은 차별적 교제 이론, 권력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은 갈등이론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뒤르켐은 규범 약화, 머튼은 목표－수단 괴리, 낙인은 2차적 일탈, 차별적 교제는 접촉과 학습, 갈등이론은 구조적 불평등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갑국			을국		
구분	2000년	2010년	구분	200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30	50	하층	50	50

① 갑국은 산업화 이전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의 계층구조로 변모하였으며, 소수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며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② 갑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구조로 산업 사회와 복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정보 사회로 발전되어 기존에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중층이 될 기회가 많아진다.

③ 을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낮아져 중층의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구조이다.

④ 2010년 갑국과 을국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작아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계층별 비율의 합이 100%라는 조건을 이용해 중층 비율을 구하고, 각 사회의 계층구조 변화를 피라미드형·다이아몬드형·모래시계형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연도의 중층 비율을 100-(상층 비율+하층 비율)로 구한다.
2. 상층·중층·하층의 상대적 비율로 계층구조의 유형을 판별한다.
3. 중층의 비율이 높은 다이아몬드형은 사회 통합에, 하층이 많은 피라미드형과 중층이 적은 모래시계형은 사회 불안 가능성에 연결한다.

핵심 근거

갑국의 중층 비율은 2000년 50%, 2010년 30%이므로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변하였다. 을국의 중층 비율은 2000년 30%, 2010년 20%이고, 2010년에는 상층 30%·중층 20%·하층 50%이므로 중층이 얇은 모래시계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갑국은 2010년에 상층 20%·중층 30%·하층 50%가 되어 하층이 많고 위로 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로 변하였다. 피라미드형은 산업화 이전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소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 하층을 지배하는 특징이 있다.
② X — 갑국의 2010년 중층은 30%로 하층 50%보다 적으므로 사회 통합에 유리한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이다. 틀린 표현인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구조'는 '하층의 비율이 높아 사회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계층구조'로 고쳐야 한다.
③ X — 을국의 중층 비율은 2000년 30%에서 2010년 20%로 낮아졌고, 2010년 상층과 하층의 합은 80%이다. 틀린 표현인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낮아져 중층의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낮아지고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높은 모래시계형 구조'로 고쳐야 한다.
④ X — 2010년 갑국은 하층이 50%인 피라미드형이고, 을국은 중층이 20%에 불과한 모래시계형이므로 모두 사회 안정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인 '불만이 작아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는 '희소가치 배분에 대한 불만과 사회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표에 중층 비율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정이다. ②는 갑국의 2000년 다이아몬드형 특징을 2010년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③은 을국에서 실제로 감소한 중층을 증가한 것으로 반대로 서술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빠진 중층 비율을 100%에서 상층과 하층의 비율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그다음 중층이 가장 두꺼우면 다이아몬드형, 하층이 가장 두꺼우면 피라미드형, 중층이 얇고 상층과 하층이 상대적으로 두꺼우면 모래시계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층 확대는 다이아몬드형과 사회 통합, 하층 확대는 피라미드형, 중층 축소는 모래시계형과 사회 불안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9. 인구변천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산다사(多産多死)→감산소사(減産小死)→다산감사(多産減死)→소산소사(小産小死)의 과정으로 변천된다.

②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속하며,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단계이다.

③ 감산소사(減産小死)형은 인구증가가 완화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가족계획 정책이 실시된다.

④ 소산소사(小産小死)형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며, 인구증가 속도가 정체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인구변천 과정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는 순서와 각 단계의 사회적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산다사: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가 거의 늘지 않는 산업화 이전 단계이다.
다산감사: 출생률은 여전히 높지만 사망률이 먼저 낮아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단계이다.
감산소사: 사망률은 낮은 상태에서 출생률도 낮아지기 시작하여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단계이다.
소산소사: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증가가 정체되는 고도 산업화 단계이다.
일반적인 변천 순서는 다산다사 → 다산감사 → 감산소사 → 소산소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감산소사 → 다산감사'라는 단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사망률이 먼저 낮아지는 다산감사 단계가 나타난 뒤 출생률도 낮아지는 감산소사 단계로 이행한다. 올바른 순서는 '다산다사 → 다산감사 → 감산소사 → 소산소사'이다.
② O — 다산다사는 산업혁명 이전 사회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단계이다. 두 비율이 모두 높아 자연적 인구 증가는 크지 않다.
③ O — 감산소사는 낮아진 사망률에 이어 출생률도 감소하는 단계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가족계획 등은 출생률 감소에 영향을 주므로 인구 증가세가 완화된다.
④ O — 소산소사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단계이다. 출생과 사망의 격차가 작아 인구 증가 속도가 정체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네 단계의 명칭을 모두 제시해 그럴듯하지만, 사망률 하락이 출생률 하락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핵심 순서를 바꾸었다. 따라서 다산감사가 감산소사보다 앞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업화 초기에 위생·의료 개선으로 사망률이 먼저 하락하고, 이후 도시화·여성의 사회 진출·가족계획 등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하락한다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망률이 먼저, 출생률이 나중이다: 다산다사 → 다산감사 → 감산소사 → 소산소사.

NoteBase

문 10.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형사 미성년자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범죄 성립 단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법질서 전체에서 허용되어 위법하지 않게 되는 사유이다. 책임 조각 사유는 위법한 행위가 있더라도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사유이다.

핵심 구분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은 각각 형법 제20조·제21조·제22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반면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이고,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책임 단계에서 처벌하지 않는 사유이다.
틀린 표현: 위법성 조각 사유에 강요된 행위와 형사미성년자를 포함한 부분
올바른 표현: 강요된 행위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고,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② O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O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O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사유들도 모두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를 가지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어지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은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조각하고, 형사미성년자·강요된 행위는 행위자의 책임을 조각하거나 책임능력을 부정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행·정방·긴피는 위법성, 형사미성년자·강요된 행위는 책임 단계이다.

NoteBase

문 11.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를 구분한다.

② 계층이론은 막스 베버의 다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③ 계급이론은 사회 계층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계급, 권력, 지위를 들며, 계급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④ 계층이론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서열화된 개인 집단의 위치를 구분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과 베버의 계층 이론을 불평등의 기준과 계층 구조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경제적 기준을 중심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구분한다.
베버의 계층 이론: 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 등 여러 기준을 함께 보며 사회 구성원의 위치를 다차원적으로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계급 이론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을 구분하므로 적절하다.
② O — 계층 이론은 불평등을 경제적 요인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는 막스 베버의 다원론에 바탕을 두므로 적절하다.
③ X — 틀린 부분은 '계급 이론'이 계급·권력·지위의 세 측면을 들고 계급을 상층·중층·하층으로 구분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베버의 계층 이론이 경제적 계급·정치적 권력·사회적 지위 등 여러 측면을 중시하며, 사회를 상층·중층·하층과 같은 여러 계층으로 구분한다.
④ O — 계층 이론은 소득·재산뿐 아니라 권력과 지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서열화된다고 보므로 적절하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은 베버의 다원적 계층 이론에 해당하는 '계급·권력·지위'와 '상층·중층·하층'을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에 붙여 놓았다. 두 이론 모두 불평등을 설명하지만 기준의 수와 계층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와 자본가·노동자의 대립이 나오면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으로, 경제적 계급·사회적 지위·정치적 권력처럼 여러 기준과 연속적인 서열이 나오면 베버의 계층 이론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과 양대 계급, 베버는 계급·지위·권력의 다원적 계층화이다.

NoteBase

문 12. 사실혼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혼인 의사 합치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부공동생활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재직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등과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가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받지 못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사실혼에도 인정되는 혼인생활상의 효과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신분상의 효과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합치하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재판이다.

핵심 구분

사실혼에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나 재산분할처럼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에 기초한 법률혼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그러나 친족관계와 상속권처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신분상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은 예외적으로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의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② O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인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도 나머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③ O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혼에서 생기는 신분상의 효과인 배우자 및 상대방 혈족과의 법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X
아버지의 인지를 받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곧바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인지(認知)를 받지 못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올바른 표현: 인지 또는 인지청구 판결로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된다는 원칙을 모든 신분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④를 놓치기 쉽다. 특히 공동생활의 실질에 기초한 효과와 혼인신고·인지 같은 신분행위를 전제로 하는 친족·상속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실혼 문제에서는 먼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확인한다. 그다음 재산분할·부양처럼 공동생활에 기초한 효과인지, 친족·상속처럼 신고나 인지를 전제로 하는 신분상 효과인지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연금법 등 특별법이 사실혼 배우자를 별도로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실혼은 생활상 부부이지만 신고상 부부는 아니다. 친족·상속은 원칙적으로 없고, 자녀의 부계 상속에는 인지가 필요하다.

NoteBase

문 13.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②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④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소급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와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지를 행위 전에 성문의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구분

죄형법정주의에는 관습형법 금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명확성 및 적정성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현행 헌법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고,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비슷한 사안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규정을 넓혀 적용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X —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비슷한 사안을 규정한 조항을 끌어와 새로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 ‘허용한다’ → 올바른 표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허용하지 않는다’이다.
③ O —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O —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의 내용과 그에 대한 형벌 사이에 책임과 비례에 맞는 적정한 균형을 요구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일반적인 해석 방법과 형벌법규의 해석을 혼동하게 만든다. 형벌법규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 범위를 새로 넓히는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법률에 없는 행위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나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률, 불리한 유추 금지, 소급처벌 금지, 명확성·적정성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4. 일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디플레이터	95	105	115

① 전년 대비 2016년 물가는 하락하였다.

②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③ 2018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다.

④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낮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GDP 디플레이터의 수준과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구분하고, 두 해의 물가상승률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GDP 디플레이터는 2016년 95, 2017년 105, 2018년 115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놓은 지수이므로, 한 해의 지수만으로 그 해의 전년 대비 물가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

사용할 공식

GDP 디플레이터는 다음과 같다.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물가상승률=(당해 연도 GDP 디플레이터-전년 GDP 디플레이터)/(전년 GDP 디플레이터)×100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수준을 나타내므로,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려면 지수 자체가 아니라 전년 대비 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 과정

2017년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frac{105-95}{95} \times 100 \approx 10.53\%$
2018년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frac{115-105}{105} \times 100 \approx 9.52\%$
따라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낮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016년 GDP 디플레이터 95는 2016년 물가 수준이 기준연도보다 낮다는 뜻일 뿐이다. 2015년 GDP 디플레이터가 없으므로 전년 대비 2016년 물가가 하락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전년 대비 2016년 물가는 하락하였다'는 '2016년 물가의 전년 대비 등락은 주어진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로 판단하는데, 자료에는 실질 GDP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17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대소를 비교할 수 없다. 틀린 표현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두 비율의 대소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2018년 GDP 디플레이터가 115이므로 명목 GDP/실질 GDP×100=115이고, 명목 GDP는 실질 GDP의 1.15배이다. 틀린 표현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다'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2017년 물가상승률은 약 10.53%, 2018년 물가상승률은 약 9.52%이므로 2018년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더 낮다.

오답 포인트

GDP 디플레이터 95를 전년 대비 5% 하락으로 읽거나, 지수가 105에서 115로 똑같이 10만큼 올랐으므로 두 해의 물가상승률도 같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물가상승률은 지수의 차이가 아니라 전년 지수를 분모로 한 증가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GDP 디플레이터의 수준과 증가율을 구분한다.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각 연도의 지수 변화분을 전년 지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면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디플레이터의 수준은 기준연도와 비교하고, 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교한다. GDP 디플레이터>100이면 명목 GDP>실질 GDP이다.

NoteBase

문 15. A국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시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②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③ 기준 금리 인하

④ 지급 준비율 인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총수요를 늘리는 확대 정책과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 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대 정책은 시중의 자금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반대로 긴축 정책은 자금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높여 과열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경기 침체에는 국채 매입 확대, 기준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 인하와 같은 확대 정책이 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시중에 자금이 공급되어 통화량이 늘고 금리 하락을 유도하므로 경기 침체 대응에 적절하다.
② X — 재할인율 인상은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금융 기관의 비용을 높여 대출과 통화 공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재할인율 인상'이며, 경기 침체에는 '재할인율 인하'가 적절하다.
③ O —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여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으므로 경기 침체 대응에 적절하다.
④ O —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금융 기관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 통화 공급이 확대되므로 경기 침체 대응에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금리를 조정한다'는 공통점만 보고 재할인율 인상을 확대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금리·재할인율·지급 준비율의 인하는 확대 방향이고, 인상은 긴축 방향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가 제시되면 소비·투자와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찾는다. 국채는 매입, 각종 금리와 지급 준비율은 인하이면 확대 정책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불황에는 국채 매입,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 인하이다. 재할인율 인상은 긴축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가)	(나)
자본 조달 방법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소유자 권리	의결권	이자 수입
수익의 형태	배당금	이자

① (나)보다 (가)의 위험이 더 크다.

② 기업만이 (나)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가)를 보유한 자에 대해 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

④ (가)는 만기가 있지만, (나)는 만기가 없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의결권·배당금을 주는 주식과,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이자를 주는 채권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주식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기 자본을 구성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자가 빌린 자금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타인 자본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약정된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다.
주식은 소유 지분, 채권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주식의 배당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기업이 청산되면 주주는 채권자보다 나중에 잔여 재산을 분배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위험이 크다.
② X — 틀린 표현은 '기업만이 (나)를 발행할 수 있다'이다. 채권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나 공공 기관 등도 발행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이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소유자 지위를 가지며, 기업이 임의로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④ X — 주식과 채권의 만기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올바르게는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고, 채권에는 약정된 만기가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기 자본을 '기업 내부의 돈'으로만 이해하거나 타인 자본을 '기업만 발행하는 증권'으로 오해하기 쉽다. 자금의 출처보다 투자자의 지위가 소유자인지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결권·배당금·자기 자본이 제시되면 주식, 이자·만기·원금 상환·타인 자본이 제시되면 채권으로 판단한다. 위험은 원리금 상환을 먼저 받는 채권자보다 잔여 재산을 나중에 받는 주주가 일반적으로 더 크다.

암기 포인트

주식은 소유·배당·의결권·만기 없음, 채권은 대여·이자·원금 상환·만기 있음이다.

NoteBase

문 17.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율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비례세로 구분된다.

②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④ 조세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지방교육세는 보통세로 구분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세를 세율, 과세 장소, 과세 주체, 조세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묻는다. 핵심은 지방교육세가 특정한 용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보통세는 세수를 특정 용도에 한정하지 않는 조세이고, 목적세는 세수를 법정된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핵심 구분

세율에 따르면 비례세와 누진세, 과세 장소에 따르면 내국세와 관세, 과세 주체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조세 목적에 따르면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다. 이 문항의 출제 시점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가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로 분류되었다. 이후 주세 제도가 개정되어 현재는 탁주와 맥주에 종량세가 적용되므로, 주세는 출제 시점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 문항의 출제 시점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모두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비례세로 분류되었다.
② O. 법인세는 국내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내국세이다.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물품 등에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법인세와 구별된다.
③ O.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④ X.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틀린 표현은 '보통세'이고, 올바른 표현은 '목적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지방'이라는 말만 보고 지방세 여부만 판단하면 조세 목적에 따른 분류를 놓치기 쉽다. 지방교육세는 과세 주체에 따르면 지방세이면서, 조세 목적에 따르면 목적세이다. 또한 ①의 주세는 출제 이후 일부 주종의 과세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과 출제 당시의 분류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제시된 분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세목을 대응시킨다. '누가 부과하는가'는 국세·지방세, '어디에서 과세하는가'는 내국세·관세, '세수를 어디에 쓰는가'는 보통세·목적세의 구분이다.

암기 포인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상할 때, 현 시점(4월)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원)

구분	2월	3월	4월
원/100엔	1,000	1,050	1,100
원/달러	1,200	1,150	1,100

① 엔화 외화부채의 상환을 미룬다.

② 올 겨울에 가기로 한 일본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

③ 올해 초 수입한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서두른다.

④ 현금자산 중 달러의 원화 환전을 늦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화 표시 환율의 상승·하락을 읽고, 앞으로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외화의 지급과 수취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표의 단위가 외화 1단위당 필요한 원화 금액인지 확인한다.
2. 2월부터 4월까지 엔화 환율과 달러화 환율의 변화 방향을 각각 확인한다.
3. 환율 상승이 예상되는 외화는 지급을 앞당기고 수취·환전은 늦추며,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외화는 그 반대로 판단한다.

핵심 근거

표의 엔화 행에서 100엔당 원화 금액은 2월 1,000원, 3월 1,050원, 4월 1,100원으로 상승한다.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같은 엔화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일본 여행처럼 엔화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달러화 행은 2월 1,200원, 3월 1,150원, 4월 1,100원으로 하락하므로 달러 지급은 늦추고 달러 자산의 원화 환전은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엔화 행의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추세가 지속되면 나중에 엔화 부채를 갚을 때 더 많은 원화가 든다. '상환을 미룬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엔화 외화부채의 상환을 앞당긴다.
② O — 엔화 행의 환율이 계속 상승하므로 앞으로 엔화가 원화 기준으로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가 필요한 일본 여행 일정을 앞당기면 더 오르기 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환율로 엔화를 마련할 수 있다.
③ X — 달러화 행의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추세가 지속되면 나중에 달러 결제에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다. '결제를 서두른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늦춘다.
④ X — 달러화 행의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보유한 달러를 나중에 원화로 바꿀 때 받는 원화가 줄어든다. '원화 환전을 늦춘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보유 달러의 원화 환전을 앞당긴다.

오답 포인트

환율 상승을 원화 가치 상승으로 거꾸로 해석하거나, 외화 지급과 외화 수취의 대응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 표처럼 외화당 원화 금액이 오르면 해당 외화의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외화 지급은 앞당기고 외화 수취·환전은 늦춘다. 환율이 내리면 반대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화 지급 예정자는 환율이 오르기 전에 지급하고 환율이 내린 뒤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화를 받아 원화로 바꿀 예정인 사람은 환율이 오른 뒤 환전하고 환율이 내리기 전에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암기 포인트

외화 지급은 환율 상승 전에, 외화 수취·환전은 환율 하락 전에 처리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X재의 수요량 및 공급량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120	110	100	90	80	70
공급량(개)	60	80	100	120	140	160

① 공급자가 16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②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X재의 대체재인 Y재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하로 하락한다.

③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④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 잉여는 감소되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표에서 시장 균형과 세금 부과 후의 가격 차이를 찾고, 대체재 가격 상승과 공급자에 대한 종량세가 시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세금이 없을 때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가 내는 가격 P_d와 공급자가 받는 가격 P_s 사이에 $P_d - P_s = 600$의 차이가 생긴다. 세금 부과 후에도 거래량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아야 한다.

사용할 공식

시장 균형에서는 $Q_d = Q_s$이다. 공급자에게 개당 세금 t를 부과한 뒤에는 $P_d - P_s = t$이며, 같은 거래량에서 수요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가 세금과 같은 지점을 찾는다. 이는 수요자가 지급한 가격 중 세금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자가 받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에는 가격 1,000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두 100개이므로 균형 가격은 1,000원, 균형 거래량은 100개이다.
2. 거래량이 80개일 때 수요표의 가격은 1,400원이고 공급표의 가격은 800원이다. 두 가격의 차이는 $1,400 - 800 = 600$원이므로 개당 세금과 정확히 일치한다.
3. 따라서 세금 부과 후 수요자 가격은 1,400원, 공급자 수취 가격은 800원, 균형 거래량은 80개이다. 거래량은 100개에서 80개로 20개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가격이 1,600원이면 공급량은 160개이지만 수요량은 70개이므로 160개를 모두 팔 수 없다. 세금 부과 전 균형은 가격 1,000원, 거래량 100개이다. 틀린 표현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는 '균형 가격은 1,000원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Y재가 X재의 대체재일 때 Y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곡선이 그대로라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보다 높아진다. 틀린 표현 '1,000원 이하로 하락한다'는 '1,000원보다 높게 상승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 가격은 1,400원, 공급자 수취 가격은 800원, 거래량은 80개가 된다. 세금 부과 전 100개보다 정확히 20개 감소한다.
④ X. 세금 부과로 수요자 잉여는 감소하며, 거래량이 100개에서 80개로 줄어 상호 이익이 가능한 거래가 사라지므로 사회 전체의 후생도 감소한다. 틀린 표현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된다'는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공급량 160개만 보고 실제 수요량 70개를 확인하지 않는 함정이다. ②는 대체재 가격 상승을 X재의 수요량 감소로 오해하게 한다. ③은 세금 600원을 기존 균형 가격에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수취 가격 사이에 600원의 차이를 두어 새 균형을 구해야 한다. ④는 정부의 조세 수입을 포함하더라도 거래량 감소에 따른 사중손실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표에서 $Q_d = Q_s$인 기존 균형을 찾는다. 대체재 가격 변화는 해당 재화의 수요곡선 이동으로 판단한다. 종량세는 같은 거래량에서 수요자의 지불 가격과 공급자의 수취 가격 차이가 세금과 같은 지점을 찾아 새 거래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대체재 가격 상승 → 해당 재화의 수요 증가 → 균형 가격 상승이다. 종량세 →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수취 가격의 격차 발생 → 거래량과 사회적 후생 감소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되는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화	A재	B재	C재	D재
수요량 변화율(%)	-5	0	-10	20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② B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될 것이다.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④ D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가격이 10% 상승할 때 각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비교하여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량의 변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모든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10%임을 확인한다.
2. 수요량 변화율의 부호로 판매량의 증가·감소 방향을 판단한다.
3. 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을 가격 변화율 10%와 비교하여 가격 탄력성을 판단한다.

핵심 근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을 가격 변화율의 절댓값으로 나눈 값이다. A재는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하므로 탄력성은 5/10 = 0.5이다. 1보다 작으므로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재의 수요량 변화율은 -5%이고 가격 변화율은 +10%이므로 가격 탄력성은 0.5이다.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이다.
② X — B재의 수요량 변화율은 0%이므로 가격이 상승해도 판매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감소될 것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③ X — C재의 수요량 변화율은 -10%로 가격 변화율 10%와 절댓값이 같으므로 가격 탄력성은 1인 단위탄력적 수요이다. '완전 탄력적'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단위탄력적이라고 해야 한다.
④ X — D재의 수요량 변화율은 +20%이므로 표에서는 가격 상승과 함께 판매량도 증가한다.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판매량이 20% 증가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C재의 -10%를 큰 감소로만 보고 완전 탄력적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가격도 10% 변했으므로 두 변화율의 절댓값이 같아 탄력성은 1이다. 또한 D재의 20은 부호가 양수이므로 감소가 아니라 증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량 변화율의 부호로 증가·감소를 판별하고, 다음으로 그 절댓값을 가격 변화율의 절댓값과 비교한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으면 비탄력적, 같으면 단위탄력적, 더 크면 탄력적이다.

암기 포인트

부호는 수요량의 방향, 변화율의 절댓값 비율은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NoteBase